

가족가치확산을 위한 정책과제와 대안*

A Study on Policies and Practices for Family Value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 전공
교수 정영금**

Consumer & Housing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rofessor Jeong, Young-Keum

〈목 차〉

- | | |
|----------------|-------------------------|
| I. 서론 | IV. 가족가치확산 정책영역의 내용과 위상 |
| II. 가족의 변화와 현상 | V. 가족가치확산 정책을 위한 제안 |
| III. 가족가치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olicy objective of the spread of family value in 2nd Family Policy 2011-2015. The spread of family value is newly adapted sphere in 2nd Family Policy. But this policy objective is not clear, diverse or comprehensive. So,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wo questions: what is the family value in healthy family policy? How this objective is reflected to policy services.

Because families are shaped by changes in social norm or trend,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ing demographics of family affect to family value. And the meaning of family value and the viewpoints are clarified. Last, for the extend of this policy objective, this study suggests to reach consensus on future family in Korean society, to emphasize function of family as social safety net.

Key Words : family policy(가족정책), spread of family value(가족가치확산), healthy family initiative(건강가정운동)

* 본 논문은 2014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주저자, 교신저자 : 정영금(jeongyk@catholic.ac.kr)

I. 서론

최근 벼랑 끝에 선 빈곤층의 자살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빈곤층으로 전락한 사람과 가정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신사회위험이 나타나면서 그에 대한 해법으로 사회정책에서 가족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다양한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족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건강가정정책(이하 가족정책과 혼용함)이 수립되어 가정문제의 예방기능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가족정책의 실시과정에서는 현재 발생한 문제해결에 집중하다보니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에서의 가족지원과 차별이 되지 않은 채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가족정책에 포함된 사업의 비중이나 강조점에서 드러나기도 하며, 실제로 제시된 정책대안의 다양성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즉 아직도 정책의 많은 부분이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 및 조손가정의 문제,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할당된다.

현재 당면한 문제는 당연히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모든 정책은 이미 발생한 문제해결과 더불어 앞으로 더 이상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맞추어 정책을 수립하고 견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데, 그렇다면 가족정책의 기본이념과 목적이 가족문제의 사전적 예방인 만큼 정책수립과 대안에서 이것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정책에 대한 연구에서는 현재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일-가정 균형 정책 혹은 가족친화정책에 대한 부분이며, 이외에 돌봄정책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정영금, 2009; 송혜림 외, 2010; 진미정, 2010; 정영금, 2012; 조영희, 2014), 현재 가족가치확산

에 대한 정책연구는 미흡하다. 단지 가족가치에 대한 이론적 고찰로서 가족에 대한 비판적 견해와 옹호적 견해를 중심으로 새로운 가족을 제시한 문헌연구(서선희, 2011)가 있을 뿐인데, 이것은 정책보다는 가족 자체의 모습에 대해 논의한 연구이다. 그러나 가족정책 전체를 놓고 볼 때 여타 하위영역의 정책에 비해 가족가치확산에 관한 정책은 관련 연구나 조사가 전혀 없어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책대안제시가 필요하다.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1차 계획과 달리 가족가치확산 영역이 부각되어 있으며, 이는 가족정책을 주관하는 부처에서 가족가치에 대한 공감대형성과 가치확산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상의 정책이나 사업면에서 볼 때 다양한 사업이나 목적성이 보이지 않으며, 정책연구측면에서도 기타 다른 하위정책에 비해 관련 연구가 적다. 특히 가족가치부분에서는 연구자들과나 정책입안자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나 지식과 정보가 없어 정책대안이 부족한 실정이다. 즉 가족정책을 수립하면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가족과 가족가치에 대한 이론적 부분이 공유되지 못함으로써 결국 각론부분만 정책이 비대해지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가족정책의 하위과제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상대적인 비중이나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 가족가치확산 관련 정책을 재조명하여 가족의 중요성과 가치의 인식 및 확산, 다양성의 인정과 이를 통한 연대와 통합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정책에서 가족가치확산 부분이 갖는 의미와, 위상,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우리사회에서 지향해야 할 가족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감대형성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우리나라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가족의 변화와 현상들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가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

으며 무엇이 문제인가, 다양한 가족들이 갖는 가족가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시작한다. 또한 가족정책이 지향하는 가족가치는 무엇이며 이것이 정책과제에 잘 드러나 있는가를 확인해보고 가족가치확산을 위한 정책대안을 검토해본다.

본 연구는 가족정책이 지향하는 가족의 모습과 가족의 가치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므로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가족의 모습과 가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보는 것이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유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즉 급격한 변화를 통해 다양한 가족의 모습이 만들어지면서 가족의 필요에 대처하는 정책이기 보다는 선제적인 가족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미래 방향을 제안해보는 것은 앞으로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가족의 미래와 가족정책의 방향 제시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현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건강가정사업의

아이디어를 기획하는데 단초가 될 수 있다. 특히 외국의 가족정책사례 제시를 통해 우리에게도 적합한 의제설정이나 문화확산, 사업제안 등에 활용될 수 있다.

II. 가족의 변화와 현상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이나 고령화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일반적인 추세가 되어 버렸고, 그러다보니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기보다는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이 되어버렸다. 물론 저출산이나 고령화현상은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에서 모두 경험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데에서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 과거와 달리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나 가족의 생활 방식들이 변화하면서 가족의 모습들은 충분히 달

〈표 1〉 세대구성(1980~2010)

(단위 : 천 가구, %)

구 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일반가구	7,969 (100.0)	9,571 (100.0)	11,355 (100.0)	12,958 (100.0)	14,312 (100.0)	15,887 (100.0)	17,339 (100.0)
친족가구	7,470 (93.7)	8,751 (91.4)	10,167 (89.5)	11,133 (85.9)	11,928 (83.3)	12,491 (78.6)	12,995 (74.9)
1세대	658 (8.3)	916 (9.6)	1,220 (10.7)	1,640 (12.7)	2,034 (14.2)	2,575 (16.2)	3,027 (17.5)
2세대	5,457 (68.5)	6,412 (67.0)	7,529 (66.3)	8,200 (63.3)	8,696 (60.8)	8,807 (55.4)	8,892 (51.3)
3세대	1,312 (16.5)	1,383 (14.4)	1,383 (12.2)	1,266 (9.8)	1,176 (8.2)	1,093 (6.9)	1,063 (6.1)
4세대이상	42 (0.5)	40 (0.4)	35 (0.3)	26 (0.2)	22 (0.2)	16 (0.1)	13 (0.1)
1인가구	383 (4.8)	661 (6.9)	1,021 (9.0)	1,642 (12.7)	2,224 (15.5)	3,171 (20.0)	4,142 (23.9)
비친족가구	117 (1.5)	160 (1.7)	166 (1.5)	183 (1.4)	159 (1.1)	226 (1.4)	202 (1.2)

자료: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라질 수 있지만 가족의 형성과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30년간의 세대구성 변화를 보면, <표 1>에서와 같이 전체 일반가구 중 친족가구의 비율이 1980년에 93.7%이던 것이 2010년에는 74.9%로 감소하였고 그 자리를 1인가구가 차지하였다. 친족가구 중에서 2-3세대가구는 감소하였고 1세대 가구가 증가하면서, 결국 전체 가구의 절반 정도가 1-2인이 사는 가구가 되었다(2010년 현재 48.2%로 조사됨). 아직은 2세대 가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5년 간격으로 단순히 비교해보아도 감소추세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11월 1일 현재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414만 2천 가구로서 전체가구 중 23.9%를 차지한다. 이 수치는 1980년도의 4.8%, 1990년도의 9.0%, 2000년도의 15.5%였던 것에 비해 8.4%나 증가한 수치이다(정지영 외, 건강가정론). 2012년은 1인 가구가 453만 9천 가구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체 가구의 25.3%를 차지하는 비율이다(2010 인구주택총조사. 2012 사회조사결과. 1인가구 현황 및 특성). 실제 가구규모를 보면, 2010년 현재 1인 가구의 규모는 10년 전(2000년 222만 4천 가구)에 비해 191만 8천 가구(86.2%) 증가했는데, 남자가 97만 9천 가구(103.6%) 늘어 여자 93만 8천 가구, 73.3%) 보다 더 많이 증가하였다. 즉 <표 2>에서와 같이 2010년 11월 1일 현재 일반가

구원 중에서 남자는 8.4%, 여자는 9.3%가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나 2000년과 비교해볼 때 전체적인 비율은 여자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지만, 상승률로 보면 남자는 4.1%, 여자는 3.7%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1인가구가 증가한 데에는 분거가족의 영향도 크다고 볼 수 있다. 가족이 따로 사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 분거가족의 비율은 19.6%로 다섯 가족 중 한 가족이 떨어져 살고 있다. 이 중 국내분거비율은 17.4%이며 가족이 국외에 거주하는 비율은 2.2%로 나타났다. 가족이 따로 살고 있는 이유는 국내 분거의 경우 ‘직장’(62.3%), 국외 분거의 경우 ‘학업’(53.2%)이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와 분거하는 가구주는 5.7%로, 분거이유는 ‘직장’이 72.3%로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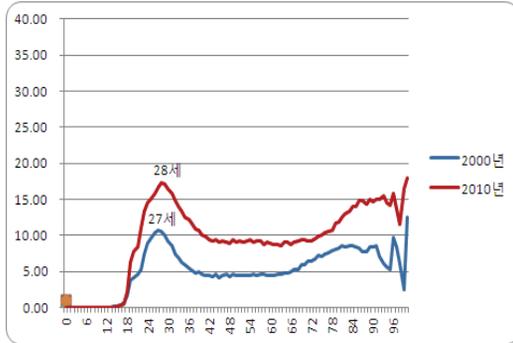
2010년 11월 1일 현재 1인 가구의 성별 및 연령별 비율을 보면, <그림 1>, <그림 2>와 같이 남자는 혼인 직전인 28세(17.3%)에서 정점을 이루다가 점차 감소하는데 비해, 여자는 26세(13.0%)에서 1차 정점에 달한 후, 혼인으로 감소했다가 사별로 점차 증가해 79세(36.9%)에 2차 정점을 보이는 쌍봉 패턴을 보인다. 2000년에는 이러한 1인 가구 비율 정점이 남자는 27세(10.8%), 여자는 1차 정점이 24세(7.3%), 2차 정점이 75세(26.7%)였던 것에 비해서, 2010년에는 남자의 정점이 1세가 늦추어지고, 여자는 1차 정점이 2세, 2차 정점이 4세 늦추어짐을 알 수 있다.

<표 2> 연도별 일반가구 및 1인 가구 현황

(단위 : 천 가구,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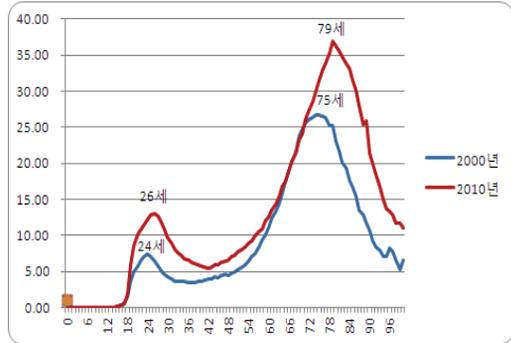
	2000년(A)			2005년			2010년(B)			증감(B-A)		
	전 체	남자	여자	전 체	남자	여자	전 체	남자	여자	전 체	남자	여자
일반 가구	14,312	11,659	2,653	15,887	12,402	3,485	17,339	12,842	4,497	3,028 (21.2)	1,183 (10.1)	1,844 (69.5)
1인 가구	2,224	945	1,279	3,171	1,418	1,753	4,142	1,924	2,218	1,918 (86.2)	979 (103.6)	938 (73.3)
(구성비)	15.5	8.1	48.2	20.0	11.4	50.3	23.9	15.0	49.3	8.4	6.9	1.1

자료: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1〉 연령별 1인 가구 분포
(남자, 2000-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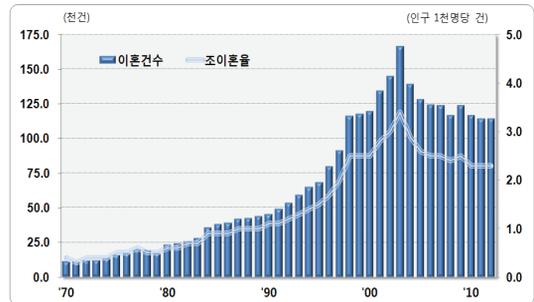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2〉 연령별 1인 가구 분포
(여자, 2000-2010년)

1차 정점의 시기가 늦추어지는 것은 결혼연령의 지연이 반영된 것(2010 인구주택총조사표본집계결과)으로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사람들의 비율이 2002년에 전체 27.2%에서 2010년에는 30.7%, 2012년에는 33.6%로 증가하였다. 여성은 2002년에 34.1%에서 2010년에 35.6%, 2012년에 39.4%로 증가하였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2002년에 19.9%에서 2010년 25.7%, 2012년 27.7%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각 년도 사회조사결과. KOSIS). 이는 결국 결혼을 통한 가정의 형성과 출산을 지연 내지 방해하게 된다.

2012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혼인이혼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2.1세, 여자 29.4세로 전년에 비해 각 0.2세와 0.3세 상승하였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남녀 모두 2.4세 상승한 수치이다. 이에 비해 2012년 이혼은 11만 4천 3백건으로, 조이혼율(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은 2.3건이다. 이는 1997년 2.0건 이후 최저수준으로서, 1990년대 들어서면서 급증하던 이혼건수가 2003년에 조이혼율 3.4건으로 최고점을 거치면서 점차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1982년 0.7%,

1992년 1.2%였던 것과 비교하면 급격히 높아진 수치이다(통계청 e나라지표).



자료: 통계청(2012). 혼인이혼통계

〈그림 3〉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추이

이러한 현상들을 기초로 통계청에서는 2035년의 인구구조를 추산하였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 2010년~2035년에 의하면, 총가구는 2010년 현재 1,735만9천 가구에서 2035년에는 2,226만1천 가구로 1.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2030년 이후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인구증가율과는 달리, 1인가구, 부부가구 등 가구분화 및 가구해체 진행에 기인하여 가구증가율이 2035년에 0.3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평

가구인원수는 2010년 2.71명에서 2035년 2.17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였다(통계청,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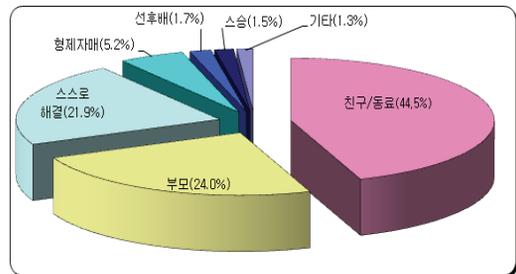
가구유형은 2010년에 부부+자녀가구가 642만7천 가구(37.0%)로 가장 많고, 1인가구(23.9%), 부부가구(15.4%) 등의 순이던 것이 2035년에는 1인가구(34.3%), 부부가구(22.7%), 부부+자녀가구(20.3%) 순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1-2인 가구가 2010년 835만5천가구(48.1%)에서 2035년 1,520만7천가구(68.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가구원수별 가구구성비는 2010년 2인>1인>4인>3인순이던 것이 2012년 이후는 1인>2인>3인>4인순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현재 급증하는 노인인구비율로 인하여 65세 이상 가구가 2010년 308만7천 가구에서 2035년 902만5천 가구로 2.9배 증가할 것이며, 75세 이상 가구는 3.8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 결과, 75세 이상 가구 중 1인가구는 2010년 48만4천 가구(45.1%)에서 2035년 210만5천 가구(51.4%)로 4.3배 증가할 전망이며, 부부가구는 3.2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통계청, 2012). 이러한 인구 고령화속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이 9일 OECD 34개 회원국의 인구구조를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은 12.2%로 30위에 머물렀지만 증가 속도는 1위를 기록했다. 각국의 고령인구 비중을 1970년 1로 설정하고 2013년까지 몇 배로 증가했는지 비교할 때 한국은 4.0배로 가장 높았다. OECD 평균 1.6배와 비교할 때 두 배 이상 빠른 속도이다(아시아투데이, 2014.9.12).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족형성 및 구조의 변화는 가족유지를 위한 육아나 가족관계, 가사노동 및 여가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 점차 가족시간의 부족 및 세대 간의 가치차이로 인해 가족관계가 단절되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약화되

고 있다. 특히 남성의 가족생활시간의 부족은 가족관계에서 아버지의 소외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여성가족부(2010)에서 실시한 제2차 가족실태 조사에 따르면, 아버지의 34.4%와 어머니의 20.1%가 자녀와의 대화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청소년 자녀들 역시 35.4%가 아버지와 대화가 부족하며 11.9%는 어머니와 대화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통계청(2012)의 사회조사에서도 청소년의 44.5%가 주로 친구나 동료에게 고민을 상담하고 있으며, 부모와 상담하는 경우는 2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 중 ‘아버지’와 고민을 상담하는 경우는 3.4%로 매우 적으며,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도 아버지와 대화하는 경우는 5.1%¹⁾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 조사에 비해 2010년에는 고민을 스스로 해결하는 청소년이 13.9%에서 16.9%로 증가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해결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통계청(2012). 2012 사회조사 결과보고서.

〈그림 4〉 청소년의 고민상담 대상자

또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의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청소년들 중 자살을 ‘가끔 생각한다’와 ‘자주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6.9%로 나타났다. 자살을 생각한 원인으로는 중학생의 경우나 고등학생의 경우 모

1) 여자 청소년이 아버지와 고민을 상담하는 경우는 1.8%로, 더 낮게 나타났다.

두 성적이 가장 많아 각각 34.0%와 46.6%로 나타났다고, 그 다음으로는 가족 간의 갈등 원인이 각각 33.7%와 21.6%로 나타났다. 더욱이 2009년에 비해 2013년의 결과에서는 중학생들이 느끼는 가족 간의 갈등이 16%에서 33.7%로 급증하였다. 또한 지난 1년간 가출을 한 경험은 전체 학생의 5.1%이며, 가장 큰 이유로는 부모님과의 문제가 65.7%를 차지하여 14.5%를 차지한 학업문제를 앞질렀다. 이렇듯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관계 형성이 가장 큰 고민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내는 사람들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2013)의 사회조사결과에 따르면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동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사람은 54.4%로 가장 높기는 하지만 2011년의 56.9%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졌으며, 특히 40대 이후 연령대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과 함께 보내는 비율이 낮아지고, 대신 혼자서 보내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가족이 소규모화되고 다양화되는 만큼 가족 간의 교류나 육아와 같은 가족고유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며, 가족 간에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가족소외현상이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가족의 자율성과 편리성을 존중하기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가족을 형성하고 유지하게 된 것이 오히려 가족들 간의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기보다 소외와 분절, 갈등과 해체를 가져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자료: 통계청, 2013 사회조사 결과보고서.

(그림 5)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

III. 가족가치

가족과 가족의 미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실상은 사람들이 가족에 대해 갖는 가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심의 대상이다. 이것이 결국 가족과 가족정책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담론이 될 것인데, 이것이 매우 불분명하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가족가치를 논의하기 전에 우선 가치란 무엇이고 어디에서부터 오는가에 대해 논의해본다.

피콕에 의하면, 가치는 가족이나 학교, 종교시설과 같은 기관에 의해, 혹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발전에 따라 잘 정리되고 문화적으로 결정된 정서나 믿음(Zimmerman, 2001)라고 하였다 또 가치란 개인 또는 집단의 명시적 혹은 암시적인, 서로 구별되는, 그리고 가용한 양식, 의미, 행동 등의 궁극적 목표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바람직한 특성(Kluckhohn & Kluckhohn, 1951, 395-403. 최연실 외, 1999에서 재인용)이라고 보기도 한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가치란 개인 또는 집단이 중요하게 추구하는 것이나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개념들로서, 작게는 개인으로부터 넓게는 사회가 열망하는 비전이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특정한 정보를 주기도 하며 사람들과 세상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대체로 타인에 대한 존중, 자율성, 선행, 진실성 등과 같은 윤리적 원리들이 사회적 가치로 인정되는데, 가치는 태도나 신념, 규범들과 유사하게 이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들은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일반적으로 자유, 평등, 공정함, 민주주의 등과 같은 일반적인 문화적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시대변화에 따라 비교적 변화가 적은데 비해서, 상대적 가치라고 표현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변화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이 더 변화하였다. 즉 도덕적인 의무나 각 집단마다 용인되는 올바른 행동 등을 덜 강조하며, 동시에

생활양식의 수용이나 개별성을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또 전통적인 핵가족을 벗어난 가족생활이나 부부간의 책임분담 등을 더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서 가족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나 생각을 가족가치라고 한다면, 가족가치는 비교적 상대적인 가치에 속하여 절대적인 가치에 비해 더 많이 변화한다. 가족가치는 주로 가족의 유형이나 기능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므로, 사회경제적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가족에 대한 개념이나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들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가족의 형태와 관련하여,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족이라고 생각해왔던 모습은 감소하고 있으며, 그에 대응하여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도 지난 반세기동안 가족의 모습이 급격하게 변화하여 일인가정과 한부모가정이 증가하였고 어린 자녀가 있는 많은 어머니들이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또 이것인 자녀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견해는 다르다. 보수주의자들은 전통적인 생계부양자-가사노동자 가족의 감소에 대해 우려하고, 자유주의자들은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경제적 기여를 지지한다. 또 자유주의자들과 여권론자들은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게 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

<그림 6>은 가족문제 발생원인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와 그를 뒷받침하는 미국 내 사회경제적 변화를 근거로 Giele(2013)이 여러 가지 모델을 비교한 결과이다. 보수주의자들에게 가족 변화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양부모가족의 붕괴와 이혼의 증가, 동거, 사생아증가, 아버지의 부재이다. 보수주의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아이들에게 커다란 위험을 초래하여, 학업의 부진, 실업, 반사회적 행동들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치유책은 미혼모나 여성가장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제한한 채 전통적인 도덕적 가치와 가족의 임무를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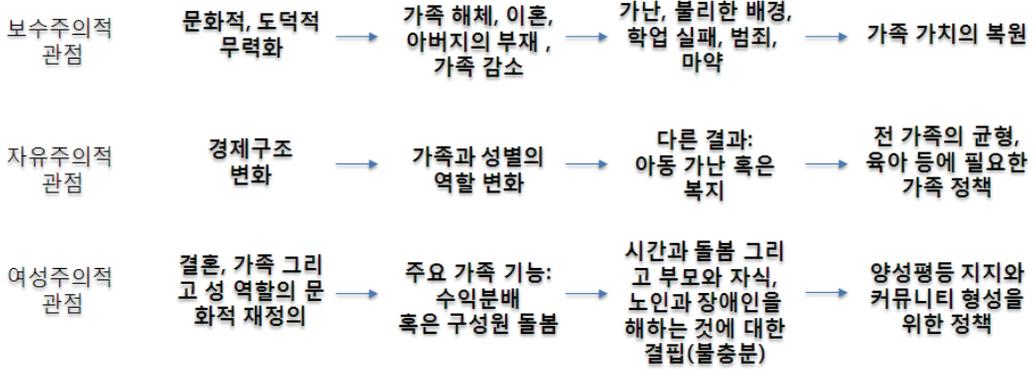
하는 것이다. 즉 결혼이라는 제도를 회생시킴으로써 결혼과 부모됨에 높은 가치를 주는 방향으로 문화가 바뀌는 것이다.

이에 비해 자유주의자들은 가족생활이 변화하고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이 변화의 원인을 가족가치의 상실보다는 경제적인 재구조화로 보았다. 가족은 경제적 기능을 노동시장에 내어주고 사회화기능을 학교에 내어주고 나서, 부모자녀간 혹은 부부간의 관계만이 가정에 남아있게 되었다. 그러나 결혼이란 정서적 요구와 사랑에 민감하므로 쉽게 깨지거나 변하기 쉽다. 그래서 자유주의적 해결책은 일-가족 통합, 자녀보호프로그램, 환자나 노인 등의 가족돌봄과 같은 광범위한 가족정책을 펴는 것이다.

가족의 구조적 변화에 초점을 두는 자유주의적 관점과 달리, 여성주의자들은 가족의 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화적 개념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데에 초점을 둔다. 여성주의적 관점은 남녀의 역할에 대한 생물학적인 이분법에 도전하여 생계담당자와 돌봄역할을 남녀 구분없이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들은 가족의 강점을 형태가 아닌 기능으로 보았으며, 자녀돌봄이라는 기능이 잘 수행되지 않는 것은 양부모가족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한부모 가정이나 교육수준이 낮은 가정의 저소득문제, 부적절한 아동돌봄의 문제, 주거 및 환경 문제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가족돌봄의 기능이 잘 수행되고 가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을 통해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보고, 사회자본을 형성하거나 이웃 및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해결책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가족가치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에 가정과 사회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족 안에 내재되어 있는 반사회적, 가부장적 양상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여성주의적 가족연구가 이루

가족가치



출처: Giele(2013)

〈그림 6〉 가족가치에 대한 관점

어지게 됨으로써, 이들이 가족연구에 기여하는 바는 있었으나 가족이 억압과 차별을 가져오는 제도라는 시각을 갖게 하였다. 서선희의 가족가치에 대한 재고(2011)에서는 여성주의자들의 가족에 대한 관심이 가정 내 성차별에 있었던 만큼 여성의 입장에서 접근하였고, 그 결과 가족가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에서 상당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정리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가족에 대한 비판적 견해에 대비되는 옹호적 견해를 중심으로 가족의 가치를 제시하였으며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할 수 있는 가족의 유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가족의 기능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찾아본다는 점에서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Bogensneider(2006)도 가족가치를 사회와의 관계 하에서 논의하면서, 개별사회 및 시장경제에 미치는 가족의 역할이나 사회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는 가족의 기능을 강조함으로써 가족가치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가족의 인구통계학적 모습과 가족의 가치관들이 변화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가족의 유형이 변화하는 것이므로, 어떤 형태로든지 가족이 기능을 하고 사회

와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가족의 유형이 변화하고 가족의 기능이 사회로 대체되면서 가족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감소되고 있지만, 가족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가족을 지원할 방안을 강구한다는 점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가족의 기능이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같은 맥락에서, Giele이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를 3가지 모델로 구분하여 가족가치에 관한 관점이라고 명명하였지만 모두 각 모델과 관점에 따라 다양한 문제의식과 해법을 갖는다. 결국 가족의 변화와 그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와 문제발생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나 사회가 해결책을 강구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세 가지 관점 모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가정의 모습으로 돌아가건, 국가와 지역사회가 책임을 지던 간에 가족이 해야 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가치란 추상적, 일반적 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으로서 태도, 행동, 선택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신념이므로 가족가치란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으로서 가족의 형성과 유지, 가족돌봄 등 가

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과 태도를 선택 하는데 기초가 된다. 가족가치는 가족 내에서 만들어지고 가족구성원에 의해 공유되며 가족체계의 중심이 되는 정신적인 개념으로서 가족의 정체성과 패러다임이 된다. 단지 가족마다 가족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가족정책에서 ‘가족가치의 확산’이라고 할 때 가족가치란 무엇인가, 혹은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과거 거부장적인 가족이데올로기가 강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Butterfield(2010)는 가족정책 수립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가족에 대한 통일된 개념이 없는 것이 가족가치를 논하는데 있어서 같은 어려움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가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가족의 문제들이 생겨나고 가족정책들이 만들어지면서, 가족과 가족가치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가족의 문제들이 갑자기 증가하고 가족이 불안정해지면 이미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가족 본래의 모습을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가족정책에서 목표로 하는 가족가치가 무엇이고 이 가치의 확산이 정책을 통해 구현되고 있는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IV. 가족가치확산 정책영역의 내용과 위상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은 건강가정기본법이 수립된 이후에 명실상부한 가족정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명시된 정책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따라서 2006년-2010년까지의 1차 건강가정기본계획과 2011년-2015년까지의 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가족가치확산 정책과제의 변화를 알아본다.

가족가치확산은 제 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일부분만 포함되었던 것이 제 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주요 정책과제로 자리매김하였다. <표 5>에 비교한 바와 같이, 우선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 모두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를 정책비전으로 삼고 그 안에 6개 정책과제를 두었다. 1차 계획기간은 가족정책이 새로 시작된 시기이므로 그 당시 사회적 이슈가 되기 시작한 돌봄과 일-가정 양립 등에 초점을 두었다. 새로 시작된 정책들이지만 아이돌보미 사업의 도입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확대, 한부모 및 다문화가족지원 등의 사업을 확장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가족이 돌봄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고 남성의 가사 및 육아참여가 여전히 미흡하며, 한부모 및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새로운 가족관계 및 민주적인 가족문화조성이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추진하기에는 다소 모호하거나 일회성 행사의 성격이 강한 등 비전 부족하다는 문제들이 있었다.

따라서 제 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함께 만드는 행복한 가정,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사회’를 정책비전으로 삼아 5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가족가치확산 과제를 전진배치하여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과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가족가치확산은 1차 계획에 5번째 정책과제로 제시된 ‘새로운 가족관계 및 문화조성’ 과제가 확장된 것으로 보이며, 1차 계획에서는 명기되지 않았던 ‘가족가치’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가족의 중요성과 다양성을 인정하고자 하였다.

〈표 3〉 1, 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비교

1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정책비전	- 가족 모두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	정책비전	- 함께 만드는 행복한 가정 -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사회
정책목표	- 가족과 사회에서의 남녀간 세대간 조화실현 - 가족 및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증진	정책목표	- 개인과 가정의 전 생애에 걸친 삶의 질 만족도 제고 - 가족을 위한 가족을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
가족 돌봄의 사회화	1-1 가족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1-2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가족가치의 확산	1-1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1-2.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
직장 가정의 양립	2-1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 2-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반 구축	자녀 돌봄 지원 강화	2-1. 자녀 돌봄 지원의 다양화 2-2. 부모역할 지원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3-1 한부모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 체계 구축 3-2 다문화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3-3 다양한 소외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3-1.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확대 및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3-2.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활성화 3-3. 가족돌봄자 및 취약가정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4-1 가족 친화적 직장 환경 조성 4-2 가족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4-3 안전한 가족생활환경 조성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4-1.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 4-2. 가족친화적인 지역환경 조성
새로운 가족관계 및 문화조성	5-1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문제 예방 5-2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가족정책 인프라 강화와 전문성 제고	5-1. 가족정책 기반 강화 및 효율화 5-2.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전문화와 특성화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6-1 가족정책의 총괄·조정 체계 정비 6-2 가족정책 추진 인프라 확충 및 내실화		

출처 : 관계부처합동.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가족가치의 확산 영역은 <표 4>와 같이, 크게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과 남성의 가족생활참여 지원으로 구분된다.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은 다시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정착과 가족여가문화 활성화로 구분되며,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지원은 세 과제-남성 휴가휴직제도 활성화, 남성의 가족내 역할교육 강화,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확산문화조성-로 구분된다.

정책의 제목만으로 사업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제목이 내용을 대표한다고 볼 때, 가족가치확산은 평등한 가족문화와 여가문화 활성화, 그리고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위한 제도마련과 교육에 집중되어 있다. 가족가치확산을 위해 남성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는데, 그나마 남성의 휴가제도 강화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

〈표 4〉 가족가치확산 영역

1-1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1)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정착	
	(1) 가족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가족관계 관련 법령 등 개선
2) 가족여가문화 활성화	
	(1) 가족단위 여가 활성화 기반 구축
	(2) 취약계층 문화체험 기회확대
	(3) 가족과 지역사회의 공동체 문화 형성
1-2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	
1)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위한 휴직휴가제도 활성화	
	(1) 자녀양육, 배우자 돌봄을 위한 휴가제도 강화
	(2) 아버지 육아휴직 활용을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및 홍보 강화
2) 남성의 가정내 역할교육 강화	
	(1) 학교교육을 통한 남성의 가족내 역할 교육 실시
	(2) 아버지 아카데미 운영 체계화 및 아버지 교육 활성화
3)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확산 문화 조성	
	(1) 다양한 매체를 통한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독려
	(2) 아버지 학교 참여 활성화

출처 : 관계부처합동.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여 다른 영역을 아우르는 포괄적 영역이라 할 수 있다. 타영역의 정책과제들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데 비해서, 가족가치확산 영역을 사업의 지향점이 명확하지 않은 한계를 갖는다.

특히 2014 여성가족부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표 5>와 같이 가족지원사업의 주체를 통합하려는 노력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혼모 및 다문화가정의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가족가치확산정책이 가족의 가치를 복원하고 강화하기 보다는 다양한 가정을 인정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즉 가족가치확산이란 기본적으로 가족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가족들이 서로 가정을 형성,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가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할 것인데, 다양한 가족의 인정과 수용이 합해져서 가족가치의 개념이 다소 모호해진다. 물론 다양한 가정을 인정하는 것이 가족가치확산

에서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가족가치확산이란 어떤 형태의 가정이건 가정의 중요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다양한 가정의 인정을 가족가치를 강화하는 하위과제 내지는 하위목표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가족가치의 확산이 가족의 가치 강화와 다양성 인정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혼용되기 보다는,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는 가운데 다양한 가정을 수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건강가정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계획을 기본으로 지역에 적합한 가족정책을 세우게 되는데, 가족가치확산 영역은 지역마다 서로 다른 의미를 갖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한다. <표 6>은 강원도, 부산시, 인천시의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비교한 것으로서 2014년도 3월을 기

〈표 5〉 여성가족부의 2014 업무계획

추진방향				
비전	여성·청소년·가족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			
핵심 과제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회	여성·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청소년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는 사회	다양한 모습의 가족이 있는 그대로 행복한 사회
실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대표성 제고 및 인계 양성 • 경력단절 예방과 일·가정이 조화로운 사회 환경 조성 • 여성의 재취업 기회 확대 및 고용유지 강화 • 성별 영향분석 평가 강화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 여성정책 구제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 예방교육 시스템 구축 •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내실화 • 성매매·성희롱 방지 및 자활지원 강화 •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교육·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개발지원 • 청소년복지 및 자립 지원 강화 •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치유 지원 • 청소년정책 총괄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강화 •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 생활지원 •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및 사회 통합지원

자료: 여성가족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 2014. 2. 11

준으로 시도 홈페이지나 관련 정책연구기관에 고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 결과 가족가치 확산영역은 가족의 가치를 소중히 하고 가치를 강화하는 내용보다는, 다양한 가정의 지원으로 축소해석되거나 저출산대응책으로 변형되기도 함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자체나 중앙정부 모두 가족가치확산을 중요한 정책영역으로 확보하기는 하였지만, 포괄적이고 본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남성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가족문화 형성이나 저출산대책 정도에 그치고 있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너무 빠른 시간 내에 가족이 변화하고 다양한 가정이 생겨났으며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는 것이 가족정책의 목표이고 방향이다. 그러나 많은 가족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모든 가족이 제 기능을 잘 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잘 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기능수행을 통해 사회단위로서의 역

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족정책의 기본 방향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가족가치확산 정책영역은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타 정책영역과 달리 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가족기능을 회복하도록 교육하며 올바른 가정생활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인 만큼, 정책에 대한 이해와 방향이 중요하다. 또한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예방적 사업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영역이므로 전체 가족정책의 방향을 좌우하기도 하므로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족을 가치있게 생각하고 그 가치를 확산한다는 정책목표나 명칭은 선언적인 표현이므로, 실제로는 모든 가족이 가치있게 다루어지고 유지되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가족을 가치있게 생각한다는 것은 가족의 모습이나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그들의 변화하는 욕구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인데, 이들이 갖는 문제나 욕구는 항상 달라질

〈표 6〉 3개 시도의 건강가정기본계획 비교

	강원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정책 비전	함께 만드는 가족 행복 함께 누리는 가족 복지		가족이 행복한 도시 부산		더불어 가꾸는 건강한 가정, 더불어 평등하고 행복한 인천		
정책 목표	1. 다양한가족의 욕구에 맞게 지원		1. 아버지와 함께 만들어가는 가족문화		1.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조성		
	2.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도움이 되는 지원		2.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돌봄 서비스 강화		2. 평등하고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3. 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가족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3. 다양한 가족의 정책욕구를 충족시키는 인프라 구축		3. 모든 가족의 삶의 질 향상		
추진 전략	체감, 공감, 쾌감		참여, 돌봄, 연계		가족정책 추진체계강화, 가족·지역사회·인천시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정책 영역	다양 한 가족 에 대한 맞춤 형 지원 강화	1. 한부모 가족자립 역량강화 및 지원 내실화	가족 가치 의 확산	1.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일- 가족 생활 양립 지원 강화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	
		2.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강화		2.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지원		2.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확산	
		3. 군인가족 지원 활성화		3.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자원 확충		자녀 돌봄 지원	1. 부모교육 및 부모역할 수행지원
		4. 가족 유형별 위기 지원		1. 자녀 돌봄 지원의 다양화			2. 지역사회 자녀돌봄 서비스의 다각화
	자녀 돌봄 및 양육 지원 내실 화	부모역할 지원강화	가족 돌봄 지원 강화	2.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역할 지원	다양 한 가족 의 역량 강화	1. 한부모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강화	
		2. 자녀의 고든 성장과 발달 지원		3. 가족의 노인 돌봄 부담 완화		2. 다문화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서비스 확대	
	가족 친화 적 사회 환경 조성	1. 가족정책 전달체계 강화	다양 한 가족 의 역량 강화	한부모 가족지원 정책확대		가족 친화 적인 지역 사회 환경 조성	1. 가족생활 안전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2. 강원도형 가정친화마을 조성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활성화	가족의 풍요로운 여가를 보장하는 지역사회		
		3. 강원도형 가족친화경영 및 직장 문화 구축		3. 취약가정 지원체계 구축			
			가족 친화 사회 환경 조성	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가족 가치 및 가족 문화 의 확산	1. 가족가치의 확산	
2. 가족친화 지역환경 조성				2. 건강한 가족문화의 확산			
가족 정책 프라 강화			1. 가족정책 기반강화	가족 정책 인프라 강화	1. 가족정책 추진 기반 정비		
			2. 정책 전달체계 전문화, 특성화		2. 가족지원서비스 인프라의 내실화 및 효율화		

출처 : 부산광역시가족정책종합계획(2011-2015)수립연구.

강원도가족정책기본계획(2011-2015).

인천광역시 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

* 2014. 3월 기준으로 시도홈페이지 및 관련정책연구기관 홈페이지에 탑재된 파일만을 비교함.

수 있으므로 변화와 요구를 예측하고 위기에 1차적으로 가정이 대응할 수 있도록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가족은 구조나 형태,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만큼, 그들이 갖는 생각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의 욕구가 사회와 국가 정책을 통해 지원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가치확산 정책영역은 예방적, 통합적, 혹은 선도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V. 가족가치확산 정책을 위한 제안

1. 가족에 대한 합의와 그를 통한 가족의 중요성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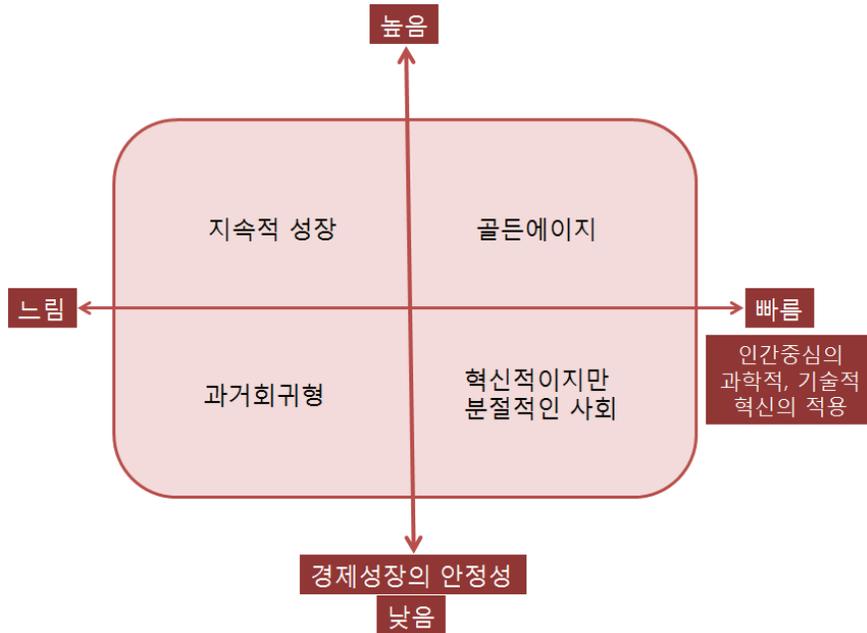
우리 사회는 유난히도 사회경제적 변화가 빨라서, 가족의 변화도 어떤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빠르게 진전되었다. 그 결과, 가족수나 가족형태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가족은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 그러나 이것을 가족의 해체로 보고 가족의 기능을 다른 조직이나 사회가 대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가족가치의 변화에 대한 시각들이 서로 다른 것과 같이 가족의 정의와 기능, 모습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적어도 가족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는 미래의 가족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즉, 변화하는 가족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를 정책이 지원해주는 문제와는 별도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족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가족정책의 방향과 정책의 개입정도를 결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준다. 가족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비전과 목표가 정해져야 하며, 그에 따른 정책영역과 과제들이 결정되는데, 가족가치확산영역은 가족에 대한 명확한 개

념이나 규정이 없는 서비스가 결정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정책이 가정의 문제에 얼마나 개입해야 하는가는 사회에서의 가정의 역할과 중요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가족 및 가족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규정이 서로 연계되어 과제가 선정될 필요가 있다.

가족의 변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공통된 현상으로서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을 염려하고 있으며 가족가치관의 변화와 1인가구의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OECD의 보고서(2012)에 의하면, 1인가정, 한부모가정, 무자녀부부, 평균수명, 이민자, 도시화 등의 증가를 공통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들이 가속화될 때 나타나는 사회와 가족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2030년 가족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하여 이 보고서에서는 경제적인 안정성과 인간중심적인 기술혁신의 적응정도를 두 축으로 하여 가능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앞으로 20년 후에는 대조적인 두 사회-Golden Age, Back to Basic-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았으며, 이에 따라 저소득가정과 사회통합의 문제, 일과 가정의 균형, 돌봄수혜자와 돌봄제공자로서의 노인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그림 7>참고). 또 경제적 사회적 환경을 기준으로 한 Golden Age 시나리오와 Back to Basic 시나리오를 하나의 축으로 하고, 국가의 지지정도를 또 다른 한 축으로 하여 국가가 가족의 문제해결과 복지에 대응하는 형태를 유형화하였다.

한편, 장혜경(2012)의 연구에서는 2030 한국의 가족을 전망하고 미래가족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수차례의 델파이조사를 통해 돌봄, 불평등, 가족가치를 키워드로 도출하였으며 이 세 개의 축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1. 개인가치와 가족생활 결합 시나리오, 2. 가족생활의 양극화 시나리오, 3. 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시나리오, 4. 평등사회-불평등가족 공존 시나리오, 5. 가족부담 극대화 시나리오.



출처: OECD(2012).

〈그림 7〉 20년 후의 사회경제적 시나리오

이러한 연구들은 가족의 변화를 단편적인 한 요인의 변화-가족수의 감소, 이혼율 증가, 수명 증가 등-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수치적, 정서적, 관계적, 물질적 측면-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예측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평면적인 가족의 변화에서 더 나아가 가족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며 가족의 의무와 책임을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여전히 가족의 변화에 기초한 예상이므로, 가족의 미래방향을 구상하고 그러한 가족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서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가족문제 예방과 해결에 대한 국가적인 방침하에 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미래 우리나라의 복지정책방향을 예상하고 우리가 그리는 가족의 모습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를 지향하는가에 따라 우리가 가족

정책을 통해 가족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계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가족의 미래 모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가족의 기능 강조

가족정책은 모든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일부 취약계층 가정을 지원하는데 국한되어 있어 가족정책의 영향이나 혜택을 잘 모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가족이 잘 기능을 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욕구가 충족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가족의 변화가 심각해지면서 가족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1970년대부터 일부 연구기금(National Science Foundation, National Research Council, Carnegie Corporation Council)의 지원으로 가족정책에 대

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카터 정부에서 가족의 변화가 주요의제로 다루어지고 캠페인주제가 되었다. 그 결과 가족영향세미나(Family Impact Seminar)가 시작되어 연방정부정책이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가족의 가치가 변화하고 모습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방향이 제시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미국가족정책의 목표는 가족이 건강하게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Giele, 2013).

우리 정부는 가족보듬사업이나 희망복지지원단 사업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자체별로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위험을 개별적으로 직접 경험하기 전에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통해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충격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가족정책에서는 완충지대로서의 가정의 역할을 인식시킴으로써 가정이 일차적인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3. 이를 근거로 한 가족가치확산 정책의 지향점 설정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1대 영역으로 가족가치의 확산 영역이 선정될 만큼 그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가족가치확산은 다양한 가족생활을 인정하고 원하는 사회환경 조성과 함께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통해 가족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일상적 생활에서의 건강한 가정의 의미와 가치를 실천하여 건강한 사회를 조기 위한 사업들이 포함된다. 가족정책의 가장 포괄적인 영역이라는 점에서 타영역에 비해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었고, 그런 점에서 다소 범위나 지향점이 모호할 수 있다.

실제로 가족가치확산 정책에서는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것이 함께 포함됨으로써 다양한 가족을 중

요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가족의 모습이 어떠하던 간에 모든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므로, 다양한 가정에 방점을 찍기 보다는 가정의 중요성에 강조점을 두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정이란 가치있다는 것을 사업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한 가족정책에서는 건강한 가족문화, 건강한 가족관계, 성역할분리를 넘어선 새로운 일-가정에 대한 참여 등 가족가치와 관련된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국가유지에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가족가치는 보존하고, 새로운 가족가치를 확산시키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늘어나는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사회적 통합과 지원을 통해 이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이고, 어떤 형태이건 간에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통해 가족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4. 가족가치확산 정책의 영향력 검토

2차 가족정책에서는 가족가치확산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지표로서 가족관계만족도와 맞벌이가구의 성별 가사노동시간을 설정하였다.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타 영역도 마찬가지로 정량적인 지표를 설정하기는 하였지만, 가족가치의 확산영역은 인식이나 문화개선의 영역인 만큼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 성과를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가족정책은 개별대상을 위한 정책이 아니며 ‘건강성’이라는 추상성을 내포하는 만큼 성과측정이 어려울 것이므로, 적어도 가족가치확산정책 영역이라도 점차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 정책이 가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가족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족영향세미나를 예로 들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이 가족생활의 질(wellbeing)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가족영향

보고서가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제기하기 위해 1976년부터 시작된 이 세미나는 학자와 정책입안자들간의 연구와 토론을 거쳐 정책의 영향력을 검토해왔다. 대표적으로 Ooms의 지표에 근거하여 가족에 대한 정책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도 일찍이 1980년대에 도입하여 영향력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이런 활동 등은 이후 가족을 위한 시민운동으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Bogenschneider, 2006)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가족정책을 수립한지 10여년이 되어가고 있으므로 그간의 정책들이 우리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간의 정책 뿐 아니라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을 도입하고자 할 때도 정책의 실효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역할도 할 수 있으므로, 가족가치확산과 같이 변화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정성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사업의 편향성이나 목표부합성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가족가치 확산을 위한 시민사회운동 확대

가족가치확산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시민의 역할이 함께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정부는 가족의 문제를 국가의제로 다루면서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가족의 문제가 먼저 발생하기 시작한 미국의 경우에, 아동양육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혼과 가정의 형성을 중요시하였다.

일례로 미국연방 및 주 입법부는 양부모 없이 자라는 아동들을 줄이는데 국가적 관심을 기울여 왔다. 1996년에 의회는 양부모가정과 결혼을 촉진하는데 주정부가 복지기금을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건강 및 인적서비스부의 아동 및 가족부서는 결혼한 부모가 양육하는 것이 아동에게 가장 좋다는 연구를 기반으로,

2001년에 건강결혼운동(Healthy Marriage Initiative)을 선포하였다. 2004년에는 40개주 이상 지역에서 정부가 결혼을 지원하는 노력을 시작하였으며, 의회에서도 건강한 결혼을 유지하고 그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자금을 지원하였다(Dion, 2005를 Bogenschneider, 2006 재인용). 1996년부터는 웨스트버지니아나 아리조나주와 같은 일부 주를 중심으로 홀부모를 결혼시키고 이혼율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정부가 기금지원하는 결혼운동을 시작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오바마정부에도 이어져, 강한 가정을 강조하는 것이 정부 의제의 중심에 있다. “A strong nation is made up of strong families.”라는 오바마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Strengthening Families, Let's Move!, Supporting Working Families, Promoting Work-family Balance 등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고 Middle Class Task Force를 가동하면서 가정을 살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http://www.whitehouse.gov/issues/family>).

정부정책에 시민을 참여시키려는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인데, 미국의 경우에 'Family Life 1st'는 시민들이 가족문제해결을 시작한 사례이다. 가족의 의사결정에 가족외부의 영향력이 커지고 가족간의 시간이 적어지는 문제로 인해 'Family Life 1st'는 가족을 우선시하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이 연합하여 문제를 인식하고 정책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들은 ‘우리가 지나쳐버린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미디어를 활용하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보하였다(Bogenschneider, 2006).

호주에서도 Family and Community Program 하에서 가족과 아이를 건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가족문제해결을 물론 경제적인 지원이나 주거안정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시민사회의 노력 및 국가 운동을 큰 비중으로 포함시켰다. 양육과 부모됨, 가족관계향상, 가족법을 통해 이혼후에도 부모의 양육을 보장하는 것, 지역사회 기업의 지원, 은 아동을 안전하게 양육하

고 여성과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범국민적 운동 등을 내용으로 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노력을 강조하였다(Bogenschneider, 2006).

이상과 같이 가족가치확산은 무엇보다도 강력한 정부의 의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가족정책이 시작된 것은 환영할 만하나 아직 가족의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과거에 비해 출산률 제고나 아동양육에 투입되는 비용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저출산에 산이 2006년에 비해 8년간 7배나 늘었지만 출생아수는 2006년보다 감소하였고 합계출산율도 큰 차이가 없다(조선일보, 2014. 10.10).

이런 현실에 비추어본다면, 가족정책이 단순히 출산 및 양육을 위한 물리적, 경제적 지원이나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서야 한다. 즉 가정이 사회의 근간임을 인식하고, 올바른 가족관계와 부모역할을 통해 가정을 형성하고 유지할 때 지속가능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국가적인 의제로 선포하고 의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2011). 강원도가족정책 기본계획(2011-2015).
- 2) 관계부처합동(2013).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 3) 부산여성가족개발원(2011). 부산광역시 가족정책종합계획(2011-2015)수립연구.
- 4) 서선희(2011). 가족 가치에 대한 재고.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15/1. 137-155.
- 5) 송혜림, 조영희, 정영금, 고선강, 김유경(2010).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자녀돌봄 요구 및 정책 개발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 6) 여성가족부. 2014 업무추진계획.
- 7) 여성가족부(2005).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
- 8) 여성가족부(2010).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 9) 인천여성가족재단(2013). 인천광역시 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
- 10) 장혜경(2012). 2030 한국의 가족: 가족변화전망과 미래가족시나리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학술세미나 자료집.
- 11) 정영금(2009). 일-가정 균형과 관련된 법과 정책의 비교고찰.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2), 85-105.
- 12) 정영금(2012). 기업의 가족친화적 돌봄지원사업의 대안과 방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4), 93-109.
- 13) 정지영 · 송정애 · 임혜경 · 조성은 · 황희숙 (2012). 건강가정론. 서울 : 양서원.
- 14) 조영희(2014).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서비스 분석과 개선방안.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1), 141-162.
- 15) 진미정(2010). 일-가족 양립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의 해외사례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 16) 최연실 역(1995). 새로 보는 가족관계학. 서울 : 하우.
- 17) 통계청(2010). 2010 인구주택총조사.
- 18) 통계청(2010). 2010인구주택총조사표본 집계 결과(여성, 아동, 고령자, 활동제약, 사회활동 부문).
- 19) 통계청(2012). 1인가구 현황 및 특성. 통계청 보도자료.
- 20) 통계청(2012). 2012 다문화인구동태.
- 21) 통계청(2012). 2012 사회조사결과.
- 22) 통계청(2012). 장래가구추계 : 2010년~2035년 보도자료.
- 23) 통계청(2013). 2013 사회조사결과.
- 24) 아시아투데이. 2014. 9. 12. “한국, 고령화속도 OECD 1위,---평균보다 2배 빨라”
- 25) 조선일보. 2014. 10. 10. “저출산 예산 8년간

- 7배 늘었는데 출산율은 ---”
- 26) 한국일보, 14. 9. 9. “독거노인 급증 125만명, 1인 가구도 414만 넘어”
- 2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 실태조사.
- 28) Bogenschneider, K.(2006). Family policy matters. NJ : LEAP.
- 29) Butterfield, A., C. Rocha & W. Butterfield(2010). The dynamics of family policy. Chicago : Lyceum.
- 30) Giele, J.(2013). Family policy and the american safety net. LA : Sage.
- 31) Kamerman, S. B.& Kahn, A. J.(1978). Families and the idea of family policy. In Kamerman, S. B. & Kahn, A. J. (Eds). Family policy.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32) Lawson, K., H. Lawson(2001). Family-centered policies and practices. Columbia University Press.
- 33) Moen P. & A. Schorr(1987). Families and social policy. In M. B. Sussman & S. Steinmets(Ed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795-813. NY : Plenum.
- 34) OECD(2012). The future of families to 2030.
- 35) Zimmerman, S. L.(2001). Family policy. California TO : Sage Publications.
- 36) <http://www.whitehouse.gov/issues/family>

- 투 고 일 : 2014년 12월 30일
- 심 사 일 : 2015년 2월 5일
- 심사완료일 : 2015년 2월 6일